



일본의 노사정 합의 :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일본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일본의 노사정은 2013년 12월 20일,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대응’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을 실현하는 것,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노사정이 왜 상기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 회의’를 만들었는지를 알아보고,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노사정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노사정 협력의 진일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 회의 설치 배경과 회의 내용

노사정 회의 설치 배경

2012년 12월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압승하여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았다. 수상에 취임한 아베 수상은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과 ‘일본재흥전략’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기본방침에서 불황의 조기탈출

과 일본재생 10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3개의 화살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여 경기회복, 경제성장을 착실히 실현하고, 기업수익의 개선, 국내투자의 확대,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 임금상승과 고용 확대, 더 나아가 소비확대라고 하는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정부는 경제 선순환 실현에는 임금인상(기본임금인상, Base-up:베이스업, 즉 월 급여 인상을 의미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 회의’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3년 9월 2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정 회의 설치에 대해 노사는 경계하였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하는 령고는 노사의 자주적인 의사와 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노사정 회의가 노사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노사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¹⁾에 노사정 회의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령고의 참가배경에는, 이전 민주당 정권과는 다양한 노정 채널을 갖고 있었으나 아베 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채널이 끊겨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임금인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사정 회의 설치까지 고려한 것은 과거 10년간 일본에서 임금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노동조합의 최대 전국조직인 령고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2002~2005년까지 일본의 기업은 수출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린 기업이 적지 않았으나, 령고는 고용 유지/확보, 실업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였다.²⁾ 물론 그 배경에는 임금인상 불가라는 경영 측의 단호한 방침이 있었다. 경영 측은 고용 유지/확보, 실업문제의 해결 외에 일본의 임금이 세계 최고수준으로서 임금인상은 국제 경

1) 령고는 노사정 회의 참가에 앞서, “노동정책심의회(구체적인 노동법 제정, 개정 협의의 노사공 3자 구성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는 다루지 않을 것, 노사자치/노사교섭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밝혔다. 실제로 노사정 회의 책임자인 경제재정정책 대신은 제1회 회의 시 “구체적인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 오학수(2008), 『일본노동조합의 임금정책과 노사교섭-2000년대 춘투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쟁력 저하의 초래, 물가의 안정/하락으로 임금인상 요인 없음 등의 방침을 견지하고 있었다.³⁾ 2010년부터 4년간은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대지진의 영향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였다.

2006년 9월 26일 수상에 취임한 아베 수상(아베 1차 내각)은 2007년 춘투를 앞두고 경영자 단체에 임금인상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후쿠다 수상, 아소 수상도 각각 2008년, 2009년 춘투 시 경영자 단체에 임금인상 실시를 요구하였다. 자민당의 보수 정권 수상이 경영자 단체에 임금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만큼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무역의존도가 GDP의 약 30%(수출, 2012년 현재 15%⁴⁾)에 불과하여 내수가 증대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내수 증대에는 임금인상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베 수상은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소비세 인상(2014년 4월부터 5%에서 8%로 인상)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 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노사정 회의 내용

먼저 노사정 회의 구성 멤버를 보면, 경제재정정책 담당 대신, 재무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과 경제계, 노동계, 학계 대표이며, 노사정 회의 목적은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향해 노사정 3자가 의견을 서로 개진하여 포괄적인 과제해결을 위한 공통인식을 얻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경제계를 대표하는 일본경단련은 춘투 때 「경영노동정책위원회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영계의 방침을 내놓는데, 2008년부터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이익은 인재확보 등 총액인건비 개정의 재원으로 할 것. 2009년: 임금인상은 있을 수 없다. 2010년: 임금인상은 곤란. 2011년: 정기승급은 유지, 임금인상은 어렵다. 2012년: 임금인상 실시는 논외. 2013년: 임금인상을 실시할 여지는 없다(아사히 신문, 2013년 12월 29일).

4) 참고로 우리나라는 57%이다.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E.EXP.GNFS.ZS/countries/1W?order=wbapi_data_value_1987%20wbapi_data_value%20wbapi_data_value-last&sort=desc&display=default

회의는 2013년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 중 제1회, 2회, 5회에는 아베 수상이 직접 참석하여 노사정 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회의에서는 참가자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발언이 이어졌고, 2~4회에서는 멤버가 아닌 경영자 등을 참가하도록 하여 각 기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는 등 논의의 구체성을 높였다. 또한 회의 종료 후, 주관 대신인 경제재정정책 대신이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 그리고 논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 실시상황 등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회의를 통해 2013년 12월 20일에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대응’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은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대응에 관하여’와 붙임으로 ‘경제 선순환 실현을 향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대응에 관하여]

정부는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은행의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이라고 하는 세 개의 화살(三つの矢)을 일체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고, 기업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상황이 사라지고 있다.

경기회복의 움직임을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재생으로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수익 확대가 속히 임금인상이나 고용 확대로 연결되고, 소비 확대나 투자 증가를 통하여 한층 기업수익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실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하여 공통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9월 20일부터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오늘 정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및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별지와 같이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향해 일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 성과를 확인한다.

2013년 12월 20일

내각총리대신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

[경제 선순환 실현을 향한 대응]

1. 임금인상을 위한 노력

디플레이션 극복을 향해 경제의 선순환을 기동(起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의 호전을 기업수익의 확대로 잇고, 그것을 임금인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순환을 일본경제 전체에 파급시키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계속하여 '세 개의 화살'을 일체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확대촉진 세제를 확충하고, 현재 기업의 수익이 확실하게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도록 대지진 집중부흥기간에 25조 엔 정도의 부흥재원을 확보한 후에 부흥 특별법인세⁵⁾를 1년 앞당겨 폐지한다. 그것에 맞추어 경제계에 임금인상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방의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임금인상 상황을 추적하여 공표한다.

임금은 개별 노사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정부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하에 노사는 각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경제정세나 기업수익, 물가 등의 동향을 감안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기업수익의 확대를 임금인상으로 연결해 나간다.

그때 노동자의 미래에 안정감을 조성하고, 임금인상을 소비확대로 이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한다.

5)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의 10%를 3년간 추가로 징수하여 대지진 피해의 복구/부흥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14년도까지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앞당겨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주로 기업이 임금인상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2.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노력

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도, 노사는 각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앞으로의 경제상황 등에 따르면서, 일본경제의 호전으로 나타나는 기업수익의 확대를 임금인상으로 연결해 나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혁신이나 신진대사에 필요한 설비투자지원을 실시하고,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임금인상을 재촉한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투자 촉진 세제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꾀한다. 또한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轉嫁)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 시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비세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정조치 등을 착실히 실시한다.

기업은 하청관계를 포함한 기업 간 거래에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히 평가하고, 물가나 매입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가를 제대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조달처로 하는 기업은 부흥 특별법인세의 폐지 취지를 감안하여, 거래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3. 비정규직의 경력상승/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노동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그들의 의욕과 능력에 따라 처우의 개선을 꾀하여 경제 전체의 상승을 꾀할 필요가 있다.

노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원적인 고용형태를 고정화하지 않고, 각각의 직장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나 처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 실현/보급이나 인사처우제도의 보급/활용을 위한 노력을 다해 비정규직이 그들의 의욕과 능력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넓힌다.

정부는 경력상승 조성금의 확충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계약사원, 파견노동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촉탁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필요한 인재육성투자를 실시함과 동시에 업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그것을 처우에 적절히 반영시킨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시책의 충실을 기한다.

4. 생산성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

경제의 선순환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창조에 덧붙여 브랜드화 등 차별화로 제품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것의 원천인 인재육성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고용형태에 따라 전문성이나 지식의 축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추진한다. 또한 여성의 활약 촉진이나 다양한 인재의 활용을 꾀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희망과 기업 경영상 필요에 따른 유연한 근로 형태의 실현을 향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한층 일 가정 양립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자는 자신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장기적인 경력형성을 지향하면서 자기 개발을 통한 능력개발에 노력한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실시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력형성 지원이나 일 가정 양립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 맺음말

이상, 일본 노사정 회의가 발표한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대응'의 내용과 동 회의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1991년 거품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불경기를 겪어 왔다. 2002년부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낸 기업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4년간 임금인상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안정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불경기를 극복할 기회를 놓쳤다. 그 후, 자민당 정권은 춘투 때마다 경영자 단체에 대해 임금인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커다란 성과가 없었다.

2012년에 정권을 잡은 자민당 아베 정부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아베노믹스를 기획/실시하여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회복을 선순환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정 회의를 구성하였다. 임금 결정의 노사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노사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여,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과거는 춘투 때 경영자 단체에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지만 성과가 없었던 실패 경험을 고려하여, 노사정 당사자가 서로 참가하여 합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

이번 춘투의 노사교섭에서 상의의 노사정 합의문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임금인상이 실현될지 매우 주목되고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지도 매우 주목되는데, 그것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가 현행 5%에서 8%로 인상 조정되어, 임금인상률이 3% 이하이면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지출을 줄이면 소비 진작에 찬물을 끼얹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형태 때문에, 노조는 자기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되는 요구를 꺼린다. 그 결과 일본의 불경기가 지속하였다. 개별기업을 뛰어넘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운동을 전개할지 여부가 올해 주목해야 할 점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약 36%에 이르는데, 그들에게도 임금인상의 혜택이 돌아가 소비 진작에 기여할지도 눈여겨보아야 하며, 그들의 능력향상, 능력향상에 맞는 처우 향상,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진척될지 경제의 장기적인 선순환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올해가 그러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지, 지금부터 전개되는 춘투는 어느 때보다 더욱 주목받는 춘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 오학수(2008), 『일본노동조합의 임금정책과 노사교섭-2000년대 춘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중앙연구원.
- 내각부(2013a),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 _____(2013b), 「일본재흥전략」.
- _____(2013c),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대응에 관하여」.
- _____(2013d), 「경제 선순환 실현을 향한 대응」.
- _____(2013e), 「경제 선순환 실현을 향한 노사정 회의」, 제1회~제5회 회의록.